

체험학습 사고 교사면책 확대... 현장선 “입증 부담 여전”

교육부, 학교안전법 개정 추진
 고의·중과실 없으면 면책 확대
 업무상과실치사상도 포함 방침
 법률지원·보조인력도 늘리기로
 특례법·국가소송책임제 요구



/유튜이미지

교육부가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교사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의 학교안전법 개정을 추진한다. 다만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가 스스로 무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는 그대로”라며 추가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는 28일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학교안전사고관리지침을 현저히 위반하거나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교사와 학교 관계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의 학교안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형법 제268조에 따

른 형사책임도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이다.

개정안은 기존보다 면책 범위를 넓힌 것이 핵심이다. 현재 시행 중인 규정은 교원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만 책임을 면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를 중심으로

판단 기준을 바꾸겠다는 취지다. 적용 대상도 교원뿐 아니라 보조인력까지 확대된다. 교육부는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사전 예방조치 내용도 포함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안전사고 발생 시 교육청 전담팀과 전담 변호사를 통한 법

률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보조인력 확대와 민간 위탁 활성화 등을 통해 현장체험학습 운영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보조인력 배치 기준도 기존 학생 50명당 1명에서 ‘학급당 1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또 경찰청도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수사 지침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또 학부모와 학생 대상 안전교육 참여를 강화하고, 악성 민원 대응을 위한 학교 민원대응체계도 보완하기로 했다.

다만 교원단체와 학교 현장에서는 이번 대책만으로는 체험학습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교사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려는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현장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교청은 특히 “교원이 지침을 지켰는지와 과실 여부는 결국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하게 된다”며 “교사가 스스로 무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여전히 남아 있

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교청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처럼 교사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형사처벌 자체를 제한하는 ‘학교안전사고 특례법’ 제정을 추가 요구했다. 또 체험학습 사고와 아동학대 신고 등 교육활동 관련 소송을 국가와 교육청이 맡는 ‘국가소송책임제’ 도입도 촉구했다.

현장체험학습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제도 정비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학교가 숙박형·소규모 체험학습이나 교내 대체 프로그램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강주호 회장은 “사고 발생 시 모든 사법적 책임과 행정 부담을 개별 교사에게 지우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현장체험학습 정상화는 어렵다”며 “교사들이 안전사고 불안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서울 농촌유학 2학기 모집... 강화·용진 추가

서울시교육청, 내달 5일부터 접수
 초1~중2 서울 학생 신청 가능
 유학비 월 최대 60만원 지원



지난해 11월 28일 제주 농촌유학 운영학교인 성음초에서 열린 ‘벨롱벨롱 꿈자랑 발표회’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학생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이 자연속 공동체 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농촌유학 프로그램의 2026학년도 2학기 참가자 모집에 나선다. 참여 학생 수가 꾸준히 늘어나며 누적 참여 인원이 32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올해부터는 인천 강화·용진 지역이 신규 유학지로 추가되고 지원 기간도 확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026학년도 2학기 농촌유학 신규 참가 학생을 오는 6월 5일부터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농촌유학은 서울 학생들이 일정 기간 농촌 지역에서 생활하며 생태전환교육과 공동체 문화를 경험하는 프로그램이다.

2021년 시작된 서울시교육청 농촌유학은 매 학기 참여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올해 1학기 기준 참여 학생은 558명으로 집계됐으며, 누적 참여 인원은 3228명이다.

신청 대상은 서울 지역 공립 초등학교 1~6학년과 중학교 1~2학년 학생이다. 유학 기간은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연장도

가능하다. 거주 유형은 ▲가족체류형 ▲홈스테이형 ▲유학센터형으로 운영된다.

유학 가능 지역은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인천광역시 강화·용진군이다. 특히 인천 강화·용진 지역은 올해 처음 추가됐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기 단위 모집 외에도 단기체험 농촌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참가 학생에게는 가구당 인원 수에 따라 월 2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유학

비가 지원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장 요구를 반영해 올해부터 지원금 지급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확대했다.

2학기 참가 희망 학생은 오는 6월 12일 낮 12시까지 재학 중인 학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가배정과 유학지 사전 방문 등을 거쳐 7월 9일 최종 대상자가 확정될 예정이다. 유학생들은 8월 중순부터 시작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모집에 앞서 6월 2일 서울시교육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설명회 영상을 공개할 계획이다. 세부 모집 내용은 각 시·도 농촌유학 누리집과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농촌유학은 단순한 체험 활동을 넘어 학생들이 삶의 방식과 배움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는 교육 과정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학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교육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인천, 에너지기술공유대학 공모 선정

6년간 215억 투입 전문인력 양성

인천광역시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하는 ‘2026년도 제1차 에너지인력양성사업(에너지기술공유대학)’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지역 에너지산업 기반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기관·지자체가 협력하는 사업으로, 2026년부터 2031년까지 6년간 총 215억 원(국비 170억 원, 지방비 45억 원)이 투입된다. 이 중 인천 시 부담은 13억 원이다.

인천시는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인천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경기도와 함께 가천대학교, 경기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아주대학교, 한국공학대학교, 경기산학융합원 등이 참여하는 광역 컨소시엄을 구성해 교육과정 개발과 성과 확산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교육 분야는 해상풍력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섹터 커플링, 전력계통 및 전력변환 등 차세대 에너지 핵심 기술로, 지역 산업 수요를 반영해 설계된다.

시는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과 에너지기술 공유 플랫폼 구축을 통해 현장

중심의 인재 양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해상풍력 계통 연계, 인공지능(AI) 기반 에너지 전환 최적화 등 대학별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산학연 프로젝트와 현장실습,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결합해 교육과 취업이 연계되는 상호성 있는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남동국가산업단지과 주안·부평 국가산업단지 등 지역 주요 산업단지의 에너지 전환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에너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기술 경쟁력 강화는 물론, 청년 인재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선순환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세영 시 에너지정책과장은 “이번 선정은 인천과 경기도의 산업 기반과 대학 역량을 결합한 광역 협력 모델의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라며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에너지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기업들이 우수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인천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이숙영 기자 sy1321@

해외직구 어린이제품 10개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

서울시, 알리·테무·쉬인 제품 검사
 우양산·우비서 납·가소제 초과
 판매 중단 요청·추가 검사 예고

서울시는 해외 온라인플랫폼인 알리의 스프레스·테무·쉬인(AliExpress·Temu·SHEIN)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우양산·우비·의류잡화·완구 등 32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10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대상은 어린이 선글라스 4개, 우양산 12개, 우비 6개, 의류잡화 6개, 초저가 제품 4개다. 서울시는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와 물리적 안전성을 중심으로 검사했으며, 부적합 제품에 대해 해당 플

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어린이용 우양산 4개 제품에서는 납 초과 검출과 물리적 안전기준 미달이 확인됐다.

일부 제품의 우산살 고정대와 버튼 고정핀에서는 납이 기준치(100mg/kg 이하)의 최대 5.8배 검출됐다. 또 끝 살과 커버가 날카롭거나 기준 크기에 미달해 베임·찔림 사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용 우비 2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최대 3.6배 초과 검출됐고, 일부 제품은 조임 끈과 장식물 구조가 안전기준에 맞지 않아 걸림·질식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류·잡화 2개 제품은 pH 기준을 초과했고, 상하의 세트 제품에서는 노닐페놀이 기준치 대비 4.3배 검출됐다. 완구 2개 제품도 납 검출과 날카로운 끝 발생 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서울시는 오는 6월 어린이용 완구와 장화, 여름철 섬유제품 등에 대한 추가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름철 어린이용 우양산과 우비 등의 사용이 늘어나는 시기 만큼 해외직구 제품 구매 시 국내 안전 기준 충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달라”며 “앞으로도 해외 온라인플랫폼 판매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평택, 2027년 국·도비 7916억 확보 총력

주요 예산 확보 보고회 개최

미군이전지원법 가산분 반영 추진

평택시가 2027년도 주요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시는 지난 26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정장선 시장 주재로 실·국·소장과 부서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7년도 주요 국·도비 예산 확보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기획예산과와의 총괄 보고를 시작으로 각 실·국·소별 주요 사업 보고가 이어졌으며, 국고보조금 확보 전략과 사업 추진 상황을 종합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국비 확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대응 방안과 중앙부처 협의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평택시는 2027년도 국고보조금으로 총 7916억 원을 신청했으며, 이 중 915억 원은 「미군이전평택지원법」에 따라 가능한 사업에 대해 추가로 반영을 요청한 금액이다. 시는 해당 가산분이 실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부서별 신청액을 보면 복지국이 5608억 원(가산 686억 원 포함)으로 전체의 약 70.8%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보였으며, 기후환경국은 436억 원(가산 12억 원 포함)을 신청했다.

주요 국·도비 사업 44건에는 시 자체 추진사업도 다수 포함됐다.

/평택(경기)=김대의 기자 dykimi@